

# 어등산리조트 229억대 투자비 반환 항소심 조정으로

## 반환시기·지연이자 쟁점...리조트-광주도시공사 18일 합의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개발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해온 민간업체가 '투자비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달라'며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이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3일 403호 법정에서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조정이란 법원이 판결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양측이 합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조정 회부에 따

리 이날로 변론은 종결된다.

민약 양측 간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앞서 지난해 5월 어등산리조트가 "투자비를 달라"고 광주시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1심은 "도시공사가 유원지 시설계획을 변경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더라도 기존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부지 조성비 지급 의무가 있다"며 공사가 어등산리조트에 229억 864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투자비 지급 시기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불복, 광주고법에서 민사 항소심이 진행됐다.

당초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자였던 어등산리조트는 도시공사를 상대로 세 차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어등산리조트는 유원지 조성 뒤 골프장을 개장기로 했음에도 골프장허가가 지연되면서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첫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골프장을 먼저 개장하되 대중제 골프장 운영수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놓고 나머지 사업은 포기하

는 동시에 공원부지를 광주시에 기부 채납한다'는 데 합의했다.

2년 뒤인 2014년엔 "공영 개발 조건으로 기부한 것인 만큼 민간 개발은 무효"라며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2년여 만에 "어등산리조트는 전체 부지 중 자체적으로 사들인 경관녹지와 유원지를 시에 기부하고, 대신 시는 유원지를 민간 공모로 추진할 경우 원래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그동안 투자한 229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어등산리조트는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하다, 2021년 10월 도시공사를 상대로 세 번째인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어등산리조트와 광주도시공사 간 조정은 오는 18일 광주고법 318호 조정실에서 열린다. /김도기 기자

# 광주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 '기업경영 걸림돌 분석'...각종 규제 해결방안 마련

광주시가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광주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자치법규에 반영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는 자치구, 유관기관, 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전문가들과 현장방문단을 구성해 각종 규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또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투자 촉진,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부담 해소 등 지역현안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

쳐 중·장기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단체 등과 간담회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규제개선 전담팀(테스크포스)에 참여하는 사업부서장을 규제책임관으로 지정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중앙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으며 광주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산업현장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검토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는 불수용 사유 등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치법규 규제입증 책임제도 도입해 운영한다. /김도기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 정기총회 김영록 지사가 3일 목포시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 정기총회'에 참석, 음식문화 개선 결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기굴착기 보조금 지원...최대 5000만원

## 광주시, 1대당 940만~5천만원

광주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굴착기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2024년 전기굴착기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기굴착기 보조금은 차량 규격과 성능에 따라 1대당 940만~5000만원이 지원되며 1명이 여러 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지가 최근 연

속 6개월 이상 광주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굴착기는 2년 동안 폐차, 타지역 이전등록, 5년 동안 수출 말소해선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

전기굴착기 보조금은 오는 30일까지 등기우편·문서24를 통해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대상지는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권형안 기자

# 전남도-한국외식업 전남지회 남도음식 세계화 협력

전남도는 3일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 정기총회에 열려 남도 음식 세계화, 도내 국립의과대학 신설 등 전남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 상생 노력을 다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원익 국회의원, 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과 조옥현 교육위원장, 박문욱 의원, 전강식 외식업중앙회장, 송기현 전남도지회장, 지역 외식업 대표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김영록 지사 "국립의과대 공모, 공정하게"

## 초고속도로·전라선 고속철·기회발전특구 등 현안 당부

김영록지사가 3일 "국립 의과대학 공모는 모든 도민의 건강을 위해 이뤄지는 만큼 도민 뜻을 잘 살피고 협조를 구해 대응책 차원에서 공정하고 원활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4월 정례회를 통해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국립의과대 신설 등 10가지 이상 지역 현안을 직접 말씀하셔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기존 통합 의대를 접고 단일의과대 공모로 전환한 데 대해 "당초 통합 의대를 생각했는데 대학들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고 시기적으로 빨리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 상황이라서 공모에 나서게 됐다"며 "도민의 건강과 전남의 미래 발전, 의료 연구개발(R&D) 유치를 위해 전 직원이 모처럼의 기회를 잘 활용하자"고 말했다.

또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와 관련해 해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개념 고

속도로 앞으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역할도 기대된다"며 "도에서 기초용역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언급으로 국토부에서도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도로를 목표까지 연결하고, 종착지에 청년테마파크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라선 고속철도에 대해서 "30분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직선화를 관철시켜 명실상부한 고속철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와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김 호 기자

# 전남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마련

## "2등급 목표"...45개 세부 과제 추진

전남도가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확대 등 현장 중심의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2022년보다 2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은 점을 감안해 올해 청렴도 2등급 달성을 목표로 취약점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반부패·청렴 추진 체계 고도화, 부패 취약 분야 집중관리를 통한 고객 만족 강화, 부패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청렴문화 확산과 대외협력 강화 등 4대 전략, 45개

세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취약 분야인 외부계약도 향상을 위해 도민에게 더 다가가기, 제감하는 현장시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감사관실 직원이 부패 위험이 있는 공사·용역과 보조금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확대하고, 외부민원인에게 업무처리 중 불편사항과 부패행위 신고 방법 안내 등 '청렴 해피콜'과 '청렴지킴이 문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호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광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